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 위원회

건강연대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140-5호 3층 / 전화 711-0835 / 전송 711-0834 / 홈페이지 www.konkang.or.kr / E-mail kkyd99@hitel.net

- 보험재정 위기를 빌미로 한 보험급여 축소 절대 반대한다.
- 정부는 자신의 정책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마라 -

일시: 2001년 5월 18일

정부는 의약분업예외대상에 대한 원외처방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약분업 예외 대상자들이 선택적으로 원외처방을 받아오던 것을 금지하여, 의약분업예외대상자에게 원외처방을 하는 것은 의약분업제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들에 대한 원외처방을 전면 금지시켜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과 불편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2급 중증장애인, 응급환자, 고엽제후유증, 사회복지시설입소자, 1종전염병환자 등을 의약분업의 예외대상자로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원내처방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외대상자들은 원내처방이라는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일반인이 원외처방으로 30%의 약제비를 부담하는데 반해 55%(종합병원의 경우)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강요받아왔다. 이 때문에 보호자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과 약국의 이중방문을 감수하면서도 오히려 원외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분업 예외대상자들의 원외처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였던 것을 전면금지한 것은 의약분업 예외조치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강요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의약분업제도의 원칙보다는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여 보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강요하는 의약분업예외대상자의 원외처방금지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의약분업예외대상자들이 기존처럼 선택적으로 원외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약분업예외대상자들의 원내처방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원외처방 약제비와 동일한 30%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치과 스케일링 보험 급여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대표적인 잇몸병 관리 방법인 스케일링(치석제거)에 대한 현행 보험급여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보험재정낭비와 구강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스케일링 보험급여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다수 성인이 잇몸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케일링이 잇몸병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보험 급여화 하였음에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보험재정 운영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 파탄위기를 맞이하자,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국민 구강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축소하려는 것이다.

과연 스케일링이 보험재정의 낭비의 원인이고, 구강건강 악화의 원인인가?

모든 질병 관리에 예방과 조기 치료가 윤리적, 보건학적으로 더 바람직하며 경제적이란 사실은 보건학의 기초 상식이다. 잇몸병도 마찬가지이다. 잇몸병이 악화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면 그만큼 치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더 경제적이다. 즉, 스케일링은 잇몸병의 악화를 막고, 더 비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심한 잇몸병 치료의 필요성을 줄이며, 치아 상실로 인한 의치 보철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필수적인 치료이고 경제적인 치료이다.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의 구강건강상식 홍보 문건에도 나와있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반복하면서까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빌미로 보험 급여를 축소하려는 것이다.

단순 치주질환의 치료를 위한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의 악화를 막고, 치아가 상실되어 비싼 보철치료를 해야하는 필요성을 줄이는 필수적인 치료이며 경제적인 치료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스케일링의 보험급여 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하며 오히려 예방적인 스케일링까지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급여 축소, 본인부담 확대 조치를 철회하고,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결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최근 복지부의 보험급여 축소 발표는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에서 본격적인 건강보험 적용범위 축소와 국민의 본인부담금 증가 등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기도가 분명하다. 결국 이것은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여온 국민에게 정부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온 정부의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수차례 해온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명백한 배신행위이다.

보험재정 파탄 해결을 위해 수가인하,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 반대 요구 활동과 환자의 알권리 확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

개하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 공대위'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보험재정 위기를 수가인하, 국고지원의 확대와 근본적인 해결책의 제시 없이 보험급여 축소나 민간보험도입 등 건강보험을 위축시켜서 국민 건강권 보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정부는 강력한 국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1. 5. 18.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

청년의료인회/녹색소비자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모임/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참된의료실

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1세

기생협연대